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Inequality of Education in Korea

저자 (Authors)	윤수인, 이홍직 Yoon, Suin, Lee, Hongjik
출처 (Source)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 2019.2, 275-283(9 pag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1) , 2019.2, 275-283(9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웰니스학회 Korean society for Wellnes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625918
APA Style	윤수인, 이홍직 (2019).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4(1), 275-283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Inequality of Education in Korea

윤수인 · 이홍직*(강남대학교)

Yoon, Suin · Lee, Hongjik(*Kang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계급과 교육 불평등에 대한 이론과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불평등한 구조를 고찰하였다. 교육은 개인의 재능에 의한 지위의 획득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사고와 함께 지위 상승과 계급 유동성의 기반이 되어왔다. 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교육기회의 평등은 구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 교육제도는 권력을 가진 지배집단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세습되어 계급을 재생산하는 불평등한 구조를 띠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지배집단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입제도 공론화를 실시했지만, 그것이 공정하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피지배집단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교육제도의 불평등 구조를 인식할 것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인 민주적 의견수렴 및 제도 개편을 촉구하였다. 또한 학력을 성공과 계급상승의 지표로 인식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청소년을 평가하는 패러다임을 벗어나 청소년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독자적인 주체로 존중하는 것이 청소년이 그 생애주기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변화하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임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nequal structure of Korean education system based on the theory and literature review of class and education inequality. Education has been the basis of status ascension and class mobility with modern thinking which regards the acquisition of status by individual talents as legitimate.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education,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seems to have been realized. However,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reflects the will of the dominant group with power, and reproduces the clas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publicized the college entrance system to secure legitimacy, it remains questionable whether it has underwent fair and substantiv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has gained belief in the legitimacy of the people. Thus, it was urged to recognize the unequal structure of the education system and collect effective democratic opinions and reform the system instead of procedural democracy.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respecting youth as independent subjects with various possibilities allows the youth not only to live a full life in their life cycle but also to grow as a competent citizen in a changing world.

Key words: education, inequality, class reproduction, college entrance system, legitimacy

* hongjiklee@kangnam.ac.kr

I. 서론

기든스는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유무 및 집단들 간의 권력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베버의 입장을 취하면서 자본가, 노동자 외에 '공인된 기술의 소유'와 '학위증'을 가진 세 번째 계급을 상정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계급들 사이의 경계선은 겹치거나 흐려질 수 있으며, 계급들 간의 폐쇄나 배제의 정도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님을 지적했다(그랩, 2017).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중간계급의 가변성은 '학력'에 대한 집착과 교육열의 기반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이나 권력을 지닌 지배집단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학력과 그에 수반되는 좋은 직업을 통한 지위의 획득과 자본의 축적이 계급상승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어왔다. 전후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학력은 능력의 지표가 되어 하나의 지위집단을 형성한 것이다.

학력에 대한 강조는 20세기 후반 성과 위주의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성과를 강요받는 '성과주체'의 탄생과도 관련된다(한병철, 2012). 성과사회는 '~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율의 사회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사회다. 이 사회에서는 성과가 성공이자 곧 미덕이며, 그 중에서도 학력은 성과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자 계급 유동성의 발판이 되었다. 좋은 성적과 학벌이 주는 이익들을 체험한 기성세대는 자녀세대에게 좋은 성적을 내서 이 사회에서 성공할 것을 강요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이 시스템에 저항하지 못하고 현 교육제도 안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무한한 긍정의 사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는 과거의 귀속적 불평등을 성취에 따른 불평등으로 전환시키고 재능의 차이에 의한 불평등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토대의 불평등은 간과해버린다. 교육 기회의 평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의

요소들을 파악하고 대입제도를 비롯한 현 교육제도와 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미래의 전망과 청소년의 복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이론과 문헌고찰

1. 교육과 계급 재생산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24세 등으로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13-18세의 중·고등학생을 청소년이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이 시기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매여 있는 시기이므로 교육제도와 청소년의 복지는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해방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고학력 인력이 요구되었고 우리나라의 교육은 급격히 팽창되었다. 대학진학률이 거의 70%에 이르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 현 사회에서 가장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 획일적인 학교 체제 안에서 학력에 의한 계층적 우열관계를 인정하며 '똑같지만 남보다 잘하는 된다'는 긍정성에 갇힌 채 대량생산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타 있는 것이다(조한혜정, 2016).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중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2017년 기준 99.7%에 이르고 고등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68.9%에 이르는 현실(국가 지표체계, 2017)에서 한국의 교육제도는 양적 팽창과 함께 원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표면적인 교육 기회의 평등 안에 내재해 있는 교육의 불평등한 측면들을 고찰하고 현 교육제도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지

적하고자 한다. 학력에서의 성취를 통한 계급의 유동성이 완전히 폐쇄된 것은 아니지만, 현 구조에서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높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의 원천이 계급과 결합된 권력의 소유 유무라고 볼 때, 현 교육구조 역시 성취에 따른 평등한 위계라고 단순히 정당화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계급과 권력 구조에 따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가가 공급하는 교육제도는 관료층과 지배계급의 권력을 반영하고 타인들을 일정 방향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띤다. 대학입시 제도를 비롯한 현 교육제도는 현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맞추어져 있다. 교육이 맡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화라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제도는 재능에 따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현 사회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수락하게 한다. 또한 불평등은 계급과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계층위계의 문제이며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규범 및 가치를 주입시키며 현 구조를 고착화한다. 이와 함께 현 지배계층이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대입제도 및 정책을 통해 계급을 재생산하고자 한다. 교육이 서로 대립되는 계층 간의 갈등과 지위경쟁의 장이 되면서, 지배계층은 교육에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와 기준을 부과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다(부르디외, 파세롱, 2000).

또한 현 교육제도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 성취도의 인과관계는 많은 실증연구들을 통해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계급 획득에 있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어 왔으며, 학력이 계급재생산의 기제라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종업, 2003; 김태호, 2012; Collins, 1979; Sewell, Haller, & Portes, 1969).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계급은 부모의 직업 및 자녀의 성장환경 등을 매개로 하여 자녀의 계급으로 재생산된다. 교육기회는 평등한 것처럼 확대되었지만, 그 결과에서는 부모의 학력, 경제적 계급,

사회문화적 자본 등이 자녀의 교육에 반영되어 부모의 계급이 자녀에게서 그대로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던 시대를 지나 우리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고 지위집단의 권력이 확립되어가면서 교육제도는 점점 계급을 재생산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부모의 계급, 사회문화적 자본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한 대입제도 아래 소위 ‘스펙’과 정보, 사교육, 유학 등으로 무장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을 통해 계층위계의 상층부를 세습하고 불평등의 구조는 더욱 공고해진다.

2. 교육제도와 권력의 정당성

식민지 시대와 전쟁 및 이념 대립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배계급이 소멸되고 계급 갈등에 입각한 집단적 투쟁이 금기시되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 학력을 통한 지위배분이 계급 상승의 가장 큰 통로가 되어왔다(김종업, 2003). 초기에 불평등을 생산하던 기제였던 교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로 고착되어감에 따라 교육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입시의 평준화 및 특목고 폐지 논의, 중학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과 자유학기제, 수차례에 걸친 대입제도개편 및 수정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여론수렴과 개편의 과정은 교육을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가 그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이라 볼 수 있다.

베버는 권력이란 ‘어떤 사회관계에 있는 한 행위자가 타인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개연성’(그랩, 2017)이며 현대 국가에서 권력은 합리화된 법적 질서와 정치체계를 갖춘 관료제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피지배자가 기꺼이 권력에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당성(legitimacy)’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대

국가에서 정당성은 법치국가의 합법성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에 의해 확보된다(신진욱, 2013).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 권력에 대한 지지,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지배집단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한 민주적인 결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베버의 합리적, 법적 지배의 정당성 개념은 현대에 이르러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형식적 합리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즉 합법성과 민주적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따름으로써 그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억압하고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법률과 절차만을 따랐다고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과정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다원성을 수렴하기 위한 엄밀한 감시가 필요하다.

둘째,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강조는 베버의 이해사회학과 지배사회학 간의 불화를 낳는다. 베버의 이해사회학은 '개인들의 의미 있는 행위와 주관적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것은 '정당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인식의 문제를 수반한다. 그러나 지배사회학은 피지배자의 믿음보다는 지배자의 정당성에 기초한 권력체계, 지배기구에 더 관심을 둔다(신진욱, 2013). 지배집단의 법적, 절차적 합리성에 근거한 정당성 주장이 아닌 피지배집단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정당성의 문제가 단지 합법성, 형식적, 절차적 합리성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고,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지배집단과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는 피지배집단 간의 일치가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신진욱, 2013).

즉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인 정당성과 절차를 갖추고 권력의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과연 민주적으로 피지배집단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것의 정당성을 피지배집단이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의 활동에서 교육의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으며, 그 결과의 정당성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의견수렴과 개편의 과정에서 지배집단의 의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절차적 합리성에 의해 정당화되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관철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보아야 하는 것이다.

3. 대입제도와 숙의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한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수렴, 공청회, 토론회, 주민투표, 숙의민주주의까지 다양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중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숙의만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이론체계이다(홍성구, 2011).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숙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새로운 의사소통의 질서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된다(홍성구, 2011). 정부는 2017년 신고리원전 공론화*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숙의민주주의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2018년 5월, 2022년 대입정책을 위한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는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이후,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입학처장, 대입전문가(교수 및 연구자) 총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여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 이어 11차례의 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모두의 대입발언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

* 2017년 신고리원전 공론화에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는 89일에 거쳐 67번의 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33일 동안 1인 평균 2,187시간을 숙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대한민국 정부, 2017).

를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통계적으로 국민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491명)을 구성하여 숙의 과정을 운영했다. 시민참여단에게는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습과 숙의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2박 3일 동안 2차에 걸친 숙의와 3차례의 설문 조사를 통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 결과 <표 1>과 같이 의제 1과 의제 2가 각각 1위(52.5%), 2위(48.1%)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수능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 국가교육회의, 2018).

표 1. 공론화 의제별 지지도 조사 결과

구분	(단위 : 점, %)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점수	지지 비율	점수	지지 비율	점수	지지 비율	점수	지지 비율
결과	3.40	52.5	3.27	48.1	2.99	37.1	3.14	44.4

이러한 교육부의 공식적인 발표에서도 이미 대입제도 공론화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자의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4가지의 대입 시나리오를 구성해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했는데, <표 2>에서 제시하듯이 각 의제별로 유의미한 차이나 교육적 비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형식상의 구색 맞추기로 보이는 몇 차례의 여론수렴을 거친 후,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대입당사자가 수년을 고민해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입제도를 2박 3일 동안 학습하여 2차에 걸친 숙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했고, 그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입제도 공론화는 수능확대와 수능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하는 절대평가 확대라는 두 가지 안을 동시에 도출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 수능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학생

부종합 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일반적인 논의를 반복하는 것에 그쳐 결과적으로 2022년 입시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수능평가방법에서도 소수의 학생만이 응시하는 제2외국어/한문의 절대평가 도입 외에는 현행의 상대평가 유지원칙 적용을 권고했다(국가교육회의, 2018).

표 2.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4가지 의제

(국가교육회의, 2018)

학생부·수능 전형 비율	수능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정시)수능과 (수시)학생부위주 전형 균형 유지 수능전형 45% 이상 선발			
의 제 1	상대 평가 유지	대학 자율 교육부 영향력 배제	
의 제 2	대학자율에 맡기거나 특정전형에 치우치지 않게	전과목 절대 평가	대학활용가능 단 현행보다 기준 강화 불가
의 제 3	대학자율 하나의 전형방식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	상대 평가 유지	대학자율 다만, (수시)의 취지 반영하고 전공과 관련한 계열로 제한
의 제 4	(정시)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학생부교과전 형과 (수시)학생부종합전 형 비율 균형	상대 평가 유지	대학자율

미리 제시된 4가지 의제 중 경쟁을 완화하고 학교수업을 정상화시키려는 차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항목은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평가 유지가 3개의 의제에, 절대평가는 1개 의제에만 제시되어 처음부터 상대평가로 의견이 수렴되기 유리한 구조로 제시된 기울어진 추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경향신문, 2018).

또한 35명의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4가지 의제가 과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신고리원전 공론화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짧은 숙의 기간도 문제다. 이미 의도

가 담긴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짧은 숙의를 거쳐 줄속 결과를 도출하고 시민의 참여 및 공론화라는 만병통치약 뒤로 숨어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논의한 ‘공론장의 피지배화’가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로 송부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서 수능 비율 확대, 수시 최저학력기준 활용 대학자율,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단점 보완 등을 제시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국가교육회의, 2018). 그러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능전형 45% 이상 확대라는 의제 1이 52.5%의 지지를 얻었으나, 정시축소를 의미하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제시한 의제 2도 48.1%의 지지를 얻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개 중 3개의 의제가 상대평가인 상황에서 경쟁 및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의제 2가 48.1%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의제 1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우위에 의거하여 수능전형 확대 방안을 권고하고, 처음부터 절대평가를 하나의 의제에만 배치한 것은 수능전형이 더 유리한 특목고 및 강남 3구 집단 등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공론화를 진행하고 해석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남기에 충분하다. 수능전형이 2019년도 20.7%, 2020년도 19.9%(국가교육회의, 2018)에 그치는 상황에서 수시제도가 정보와 경제력을 갖춘 계층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불공정성의 문제도 심각하다는 인식과 반발로 정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생을 창의성과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성적으로 평가하여 경쟁을 심화시키고 공교육과 학교생활을 붕괴시키는 수능확대 역시 정답은 아닌 것이다.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의 시도에서 ‘형식적 합리화’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 숙의민주주의가 무엇이 옳고 정당한지, 시민참여와 숙의가 충분하고 성숙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정교한 절차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정당성 주장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회 구성부터 의견제시 및 합의도출까지의 절차에

서 형식적인 합리성마저 지켜지지 않았으며, 민주적인 정치참여라는 목표에만 집착하여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라는 결과도 달성하지 못했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고 공론화의 길을 열어가려는 시도는 좋으나 정책적 의사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그 과정에 어떤 의도를 담아 담론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 대입제도라는 국가주도적 선발 체계에 특정 계급의 문화와 권력이 반영되는 기제에서는 교육의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이성을 갖춘 온전한 시민에 의한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절차보장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의 진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숙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윤성현, 2017).

III. 논의: 불평등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지위를 획득하고 계급을 재생산하는 경쟁의 구조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고, 베버의 권력 및 정당성의 개념을 고찰하였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 등의 정부의 활동을 검토해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는 취학 전 아동시기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입시라는 관문 통과를 위해 공부하고, 그 후 취업고시로 표현되는 취업 관문을 거쳐 취업한 후 평생 고용을 통해 노동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개인들이 학력 경쟁을 통해 얻어진 하나의 위계계층에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며, 그 역할의 중요성과 기여도에 따라 불평등한 보상을 받는다는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근대는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세습과 상속에 의한 계급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 부의 축적을 통한 계급으로 변화하면서 재능에 대한 보상을 주는 법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왔는데, 그 중 아동, 청소년을 사회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교육제도와 맞물려 학력은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보상체

계가 된 것이다(세넷, 2008). 또한 이러한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의 합의 아래 '기능'한다는 구조기능주의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위계의 계층의 순서는 누가 결정하는지, 어떤 것이 기능이고 어떤 것이 역기능인지, 합의는 도대체 누구에 의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있다. 이미 사회의 상층위계를 차지한 집단의 권력에 의한 합의와 기능들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30% 정도 존재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철저히 서열화 된 대학순위에 따라 학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지위상승을 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그것은 세습화되어 계급을 재생산하는 양상을 띤다. 대학입시라는 관문까지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원들의 질과 양에 따라 미래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구조를 띠게 될 뿐 아니라, 학생 시기에도 학습능력에 따라 차별받고 소외당한다. 더구나 교육제도 자체가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는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소년들의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첫째, 교육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대입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 및 변화에의 의지가 필요하다.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에서 대입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현 교육제도가 교육 팽창 및 중·고등학교 평준화와 함께 선발과 서열화가 대학입시제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똑같은 학생 신분이었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를 통해 가시적인 불평등과 서열화의 세계로 접어든다. 그런데 대입제도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권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면서 학력을 세습화하는 구조로 변화해왔다. 2018년 5월 정부는 대입제도를 공론화에 부치고 시민참여단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의제를 의결하는 절차를 시행했지만, 그 과정과 절차상의 비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행태들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절차가 더 민주적, 참여적, 생산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관심

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대입제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나친 학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과 경제발전이 한계에 달하고 좋은 학력을 가져도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운 고용 침체의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의대, 로스쿨 등의 전문직을 보장하는 상급학교 진학열이 과열되었지만, 그러한 전문직이라 해도 고소득과 사회적 위세를 당연히 누리기는 이미 힘들어졌다. 이런 시대를 맞아 여전히 학력과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학입시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성공적인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미래의 국민으로 바라보는 대신, 독자적인 인격과 생애주기를 살아가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그들이 교육제도 안과 밖에서 스스로를 충분히 표현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나가는 일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공부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노동하는 성과사회의 환상은 이미 붕괴되고 있다. 맹목적인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차이들을 인정한다면, 청소년들은 그 생애 주기에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한 세계에서도 더욱 경쟁력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와 교육제도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대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 속한 다수의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교육제도와 그 안에서의 권력의 방향성에 대한 주의 및 참여와 함께 학교와 대학입시에서 소외된 취약청소년들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입시라는 획일적인 생산체계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장(場)을 마련하고, 모든 청소년들을 교육을 통해 규율하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학력’에 의거한 제 3계급의 탄생과 계급 상승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학력에의 집착이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표면에 숨겨져 있는 불평등의 기제들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사회를 수락하고 인정하는 구조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어느 정도 당연하고 권력은 어디에서나 창출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이런 사회에서 개인들은 성과를 내고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의 높은 계층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결코 도달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생산구조 자체가 완벽한 완결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집단은 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고착시키고 계급을 재생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대입제도를 위시한 교육제도는 현 지배집단의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방식으로 재편되어 왔고, 그 체제 안에서 부모의 계급 및 지위는 자녀의 학력을 매개로 세습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현 대입제도가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감시와 참여를 통해 변화시키려는 인식을 갖추는 한편,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들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독자적인 주체로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력만이 유일한 기준이며,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만이 적합하고 주류인 학생으로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재고와 반성이 필요하다. 저성장과 고용침체의 시대를 맞아 학벌과 그에 따른 직업만으로 성공하고 계급 상승을 이루는 환상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지만, 성공과 지위 상승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회의도 제기되고 있다. 성공과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라는 근대적 목표 대신 자신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고 타인과 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삶

의 목표가 아닐지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교육이 불평등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사회 구조에서 평등한 삶을 달성하려면, 획일화된 기준에 의한 재능의 평가 대신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각각의 청소년들이 나름의 우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성적과 학력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서 ‘똑같지만 뛰어난’ 학생이 되는 것으로는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율권을 보장할 때, 또한 ‘모든 사람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할 때’(세넷, 2008) 상호존중에 기반한 평등의 싹이 발아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사회에서 원활한 작동으로 최대의 성과를 산출할 것을 요구받는 성과주체는 자본주의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기획의 전환에서 탄생한 것이다(한병철, 2012). 이전의 규율과 감시로 ‘복종하는 주체’보다 스스로 현 체계를 긍정하면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무장하고 성과를 위해 자신을 착취하는 ‘성과주체’가 생산성 향상에는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좋은 성적을 내서 자신을 입증하고 사회의 생산성 높은 구성원이 되어 상층 계급을 획득할 것을 요구받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어서 생각할 시점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주의적 기획은 계급의 재생산 체제로 굳어져가고, 그 속에서 맹목적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과를 추종하던 개인들은 피로와 우울에 빠졌다. 청소년들 역시 구조적으로 폐쇄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매우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과업을 부여받고 성적이라는 단일한 잣대로 재단당하며 낙오되고 좌절하며 우울증을 겪는다.

이런 시점에서 진정한 생산성이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행복한 생활을 살아감을 통해 오는 개인성장 및 자아실현에서 오는 것’(기든스; 그랩, 2017에서 재인용)이라는 기든스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더 나아가 성과와 업적을 위해

팽창된 자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세계에 자아를 열어줄 때, 자아와 타자 간의 경계를 흐리고 우애와 신뢰, 결속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한병철, 2012) 학력과 성취라는 경쟁적이고 획일적인 목표 아래 계층을 서열화해온 불평등 사회는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교육제도에 대한 긍정에 기반한 무조건적 추종에서 벗어나 '아니오'라고 말하고 사유하며, 나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공존을 위해 고민하고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불평등을 고착시켜온 현 교육제도를 균열시키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종엽(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 55-77.
- 김태호(2012). 한국 사회의 학력과 계급 재생산-대 학교육의 의미 변화와 사회구조적 파장.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907-925.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그랩, 에드워드 G.(2017). 양춘 역. **사회불평등: 고전 및 현대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세넷, 리처드(2008). 유강은 역. **불평등 사회의 인간 존중**. 서울: 문예출판사.
- 신진욱(2013). 정당성 정치의 구조와 동학 - 막스 베버 정치사회학의 관계론적, 행위론적 재구성. **한국사회학** 47(1), 35-69.
- 윤성현(2017). 국가정책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 정책론 - 참여숙의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8(3), 281-310.
- 조한혜정(2016).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부르디외, 피에르, 파세롱, 장 클로드(2000). 이상호 역. **재생산: 교육체계 이론을 위한 요소들**. 서울: 동문선.
- 한병철(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사.
- 홍성구(2011). 숙의민주주의와 이론적 보완 -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9(2), 152-184.
- Collins, Randall(1979). *The Credential Society: Historical Sociology of Education and Stratific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Sewell, W., Holler, A., & Portes, A.(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82-92.
- 국가교육회의(2018).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결과발표. _____ . 대입제도개편공론화결과보고서. _____ . 대입제도개편 권고안 발표. <https://www.eduvision.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검색일: 2018.12.15.)
- 국가지표체계(2017). 취학을 및 진학을.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검색일 2018.12.17.)
- 경향신문(2018). 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 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02204005&code=940401, 2018. 6. 20. (검색일: 2018.11.20.)
- 교육부(2018). 대입제도 공론화 결과발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 교육부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1331879326>, (검색일: 2018.11.21.)
- 대한민국 정부(2017). 숫자로 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포스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122194&memberNo=604093&vType=VERTICAL> (검색일: 2018.11.21.)

논문투고일: 2019. 12. 31
심사완료일: 2019. 01. 24
게재확정일: 2019. 02. 19